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2년 전 취재차 방문한 경기도 파주는 예상과 달리 꽤 '문화적'이었다. 북녘땅과 가까워 삭막하고 무거운 회색빛 도시일 거라는 지레짐작은 빗나갔다. 고층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여타 도시와 달리 아담하고 개성 넘치는 건축물이 많아 흥미로웠다. 특히 내 잘못만 선임견을 보기 좋게 깨뜨린 건 '헤일리 예술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독특한 외관의 문화공간들이 눈에 띄었다.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미술관, 갤러리, 카페, 서점은 저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했다. 말 그대로 '작품'이었다.

건축도 건축이지만, 15만 평에 달하는 헤일리 예술마을의 진짜 주인공은 예술인들이다. 지난 1997년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 공동체로 탄생한 이곳에는 작가, 미술인, 건축가, 음악인, 영화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380여 명이 스튜디오나 집을 지어 살고 있다.

헤일리 예술마을이 동지를 틀게 된 건 파주의 터웃대감인 이기용 열화당 대표

광주 관광, 이젠 '마인드마크'다!

덕분이다. 지난 1994년 세계적인 책마을인 영국의 헤이 온 와이(Hay-On-Wye)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임진각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술인 공동체를 제안했다. 다른 곳에서는 경합하기 힘든 예술인들의 창작 스튜디오를 대거 유치해 도시 곳곳에 문화 바이러스를 퍼뜨리자는 거였다.

이 씨의 계획은 뜻있는 예술인들이 힘을 보태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로 인연을 맺은 입주 예술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담론을 나누고, 헤일리 전속 작가회까지 결성해 발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 2009년 문화체육부로부터 지방에선 최초로 '문화지구'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헤일리 예술마을의 추억

무엇보다 작업실, 갤러리, 미술관, 게스트하우스 등 창작과 거주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2018년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은 142만 명 남짓. 한해 500만 명이 찾는 임진각과 함께 문화체육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세 차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파주시는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해 아시아 관광도시의 꿈을 키우는 중이다. 헤일리 예술마을의 성공은 제주 저지 예술인마을 등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

랐다. 지역에서도 나주 남천 예술인마을, 구례 예술인마을 등이 조성돼 제2의 '헤일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디 전남뿐이라. 광주도 변화하고 있는데, 비엔날레 도시답게 미술인들의 작업실을 지역의 콘텐츠로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7년 7월 첫선을 보인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GB작가 스튜디오' 탐방이다. 작가와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지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강운 작가를 필두로 지난해 말까지 28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빅 이벤트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기간에는 국내외 유명 큐레이터와 미술관계자들이 이들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만큼 광주 미술을 알리는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GB작가'들은 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결산 간담회에서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자신들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정례화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목표로 남도관광 특화 거점도시, 글로벌 명품관광 허브도시, 미래관광 첨단트렌드 선도도시라는 3대 전략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올 7월까지 컨트론타워로 '광주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게 국제관광도시의 허브를 지향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다만 화려한 랜드마크나 불거리,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칫 옹두사미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눈'보다는 '마음'이 즐겁게

사실 근래 관광 트렌드는 하드웨어 중심의 패키지 관광에서 지역의 숨겨진 매력과 스토리를 찾아다니는 개별 여행이 대세다. 또한 단순 체험에서 현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문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메가 이벤트인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빛을 보지 못하는 '구슬'들을 찾아 쫓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에 싹틔울처럼 퍼져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업실과 40명이 입주해 있는 예술의 거리로 '아트 하우스', 나아가 전파의 예술인마을들을 마케팅화 한다면 분명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눈이 즐거운 랜드마크에서 벗어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새기는 '마인드마크'(Mindmark)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예술인이야말로 광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므로.

은펜칼럼



강대석
시인·행정학박사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곤경에 처한 가족을 보면 내 가족도 저러면 어떨까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다. 인지상정은 법과 도덕에 앞선 인간 본연의 심성이다.

정도는 일정 수준을 뜻한다. 정도껏이라는 말은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의 과유불급과 맥을 같이 한다. 아무리 온당하고 필요한 일이라도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민심은 고개를 돌린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연일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

인지상정과 정도껏

인사를 계기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렇게 장기간의 수사와 다른 사건으로 확대된 예는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지난 낙 달 동안 찬조(贊助)와 반조(反助)로 극명하게 양분되었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검찰 개혁 집회가 토요일마다 열리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조국을 구속하라는 야당과 태극기 집회가 쉬지 않고 열렸다. 세간에는 셋만 모이면 조국과 윤석열의 이야기였다. 내용은 누구 입에서 나오든 대동소이하지만 흑어 반대편이라도 한 명 있으면 가족 간에도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다. 이것이 지난 낙 달간의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다.

사소한 예지만 조국 사건 이후라도 페이스북 친구를 몇 명 지워야 했다. 매일 페이스북에 내 생각과는 거리가 먼 글을 게시하고 태극기 집회의 주장을 올리는데 그들의 행태가 비위에 거슬려서다.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지내자는 공간에서 괜히 그런 게시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사람이 살면서 쉽잖겠지만 최소한 원한은 사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조그만 원한이라도 어느 때 비수가 되어 되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에 대한 원한을 넘어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원한이라면 그 파고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젊었을 때 정조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용보(1757~1824)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서용보는 갇혀 모이면 조국과 윤석열의 이야기였다. 내용은 누구 입에서 나오든 대동소이하지만 흑어 반대편이라도 한 명 있으면 가족 간에도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다. 이것이 지난 낙 달간의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젊었을 때 정조의 명을 받아 암행어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용보(1757~1824)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서용보는 갇혀 모이면 조국과 윤석열의 이야기였다. 내용은 누구 입에서 나오든 대동소이하지만 흑어 반대편이라도 한 명 있으면 가족 간에도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다. 이것이 지난 낙 달간의 우리 사회의 단면이었다.

으나 또다시 서용보가 극력 반대하여 마지막 출사의 길마저 막히고 말았다. 서용보의 끝없는 양심이 어느 사건을 보는 듯하다. 사가들은 서용보를 삼정승을 다 지냈지만 소인배였다고 평한다.

추미에 법무장관의 전격적인 인사로 그동안 이목이 집중되었던 일명 윤석열 사단은 해제되었다. 여러 말이 많지만 이러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의 원인제공은 윤석열 사단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국 사건을 조국 일가의 기소로 마무리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터인데 너무나 낯가드는 것이 증론이다.

옛그제 새해 신행을 위해 무등산에 올랐다. 거기에서 만난 한 등산객은 문지도 않은 말을 건네왔다. "조국이가 죄가 없기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털고 털어도 기껏 직권 남용이나 아들 시험 문제 풀이 준 것 갖고 기소할 것 보곤, 즈그들은 자식 안 카운다요?" "남의 불행은 보면 가슴 아픈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도껏 해야 지라우"

산을 내려오면서 그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지상정과 정도껏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다.

기고



전덕영
전남대 생활과학대학 교수

지역구 국회의원 배정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인구가 적은 곳은 국회의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 선거구 획정 방식은 법률에 의거하여 인구수가 바탕이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률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정당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출이 가능하며 정당 선호도에 따른 전국구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다 면 지역구의 인구수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이지가만 것일까?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시기 이후 최근까지 지역별 인구수의 변동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약진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의 인구는 각각 270%와

국토 면적을 고려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520% 증가하였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90%, 대구·경북 120%, 대전·세종·충남 130%, 충북도 110% 늘었다. 그 사이 세계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35억 명에서 70억이 넘었으니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런 데도 광주·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그 감소 폭은 각각 10%, 25%, 1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수의 비정상적인 변동의 원인들 중 하나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지역 편중 지원을 들 수 있다. 즉, 이전 정권들이 보여준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의 성장 정책을 말한다. 정부 정책 지원의 지역적 편중은 균형 잡힌 국토의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 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정직하게 대변할 임무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충실하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

관철 및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수에 따른 의원수의 결정보다는 기본적인 농·산·어촌의 지역 활달과 함께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국토 면적까지 대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면적이 40km²인 강남구에 국회의원 1명이다. 반면에 신안·무안·영암군은 면적이 1700km²인데도 한 명 뿐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점을 아무리 제시할들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부의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즉,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122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영남권까지 합하면 74%이다. 이들이 국가 예산을 자기 주장대로 나눠 가져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외 지역의 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호남과 강원 지역에는 농

산, 수산, 임산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고급의 산업을 크게 발달시켜야 하며 청정 기업의 유치기 이루어지면 수도권 인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수도권 발달과 산업단지 건설로 상대적으로 희생된 인구 감소 지역에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가 줄었다고 그나마 지역을 대변해줄 국회의원 수가 줄었다면 희망이 없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가 지역이 고사하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누구든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社說

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과 공유할 수 없나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쇼핑센터인 수완지구 롯데마트가 최근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인근 골목과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630대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4·5·6층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유료화했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간 기본요금 1000원, 이후 30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적용해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징수한다. 이렇게 되자 주차장은 갑자기 한산해졌다. 광주일보 취재 팀에 의하면 옛그제 지상 5층 주차장의 경우 고작 내 데의 차량만 주차돼 있었다.

반면 인근 골목은 유료화 이후 기존 주차 차량들이 무단 주차를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왕복 2차로인 롯데아울렛 건너편 골목길의 경우 한쪽을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하다 보니 양방향 통행 차량

들이 움푹달짝 못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는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고객들은 "주차장이 주말과 휴일에는 다소 복잡하지만 평일에는 한산한 데도 유료화한 것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주차장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 주변 상가 입주자들이 차량을 '알박기' 식으로 세워 놓는 바람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심 혼잡 구간 중 한 곳인 흙플러스 동광주점은 주차로 징수 시설을 구축하고도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징수를 보류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형 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교통 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평일 주차장 무료 개방을 고려했으면 한다.

1천억 임금 체불 설 전까지는 해소해야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자그마치 1천억 원을 넘어섰다니 놀라운 일이다. 민중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시름에 잠긴 근로자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935억 원)에 비해 98억 원(10.5%)이 증가했다. 광주는 2018년 407억 원에서 436억 원, 전남은 528억 원에서 597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조7천21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6천471억 원) 대비 746억 원이 증가했다.

당국은 매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

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응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

누구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불 임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악덕 업자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고의 및 장기간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법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 다. 올해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

無等鼓

경찰서를 출입하는 사건기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송치'(送致)라는 단어일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와 함께 관련된 서류를 경찰청으로 보낸다는 의미다. 흔히 '검찰에 송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사건을 일단락하고 '구속'이나 '불구속'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 역시 경찰에 수사 개시권과 영장 청구권을 주는 등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사권이 아예 분리돼 경찰이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직접 행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재설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음 공론화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2년 만에 입법 회담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공수처법과 함께 '검찰 개혁 3중 세트'로 부르면서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지만, 검경 상호 협력 시대의 개막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얻은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검경 협력 시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